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2026년 3월 25일(수) 14:00-16:00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발제 1

교차하는 기정학과 지정학,
『전략국가 KOREA』의 비전과 과제

조병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교차하는 지정학과 기정학 「전략국가 KOREA」의 비전과 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
2026.03.25 (수) 14:00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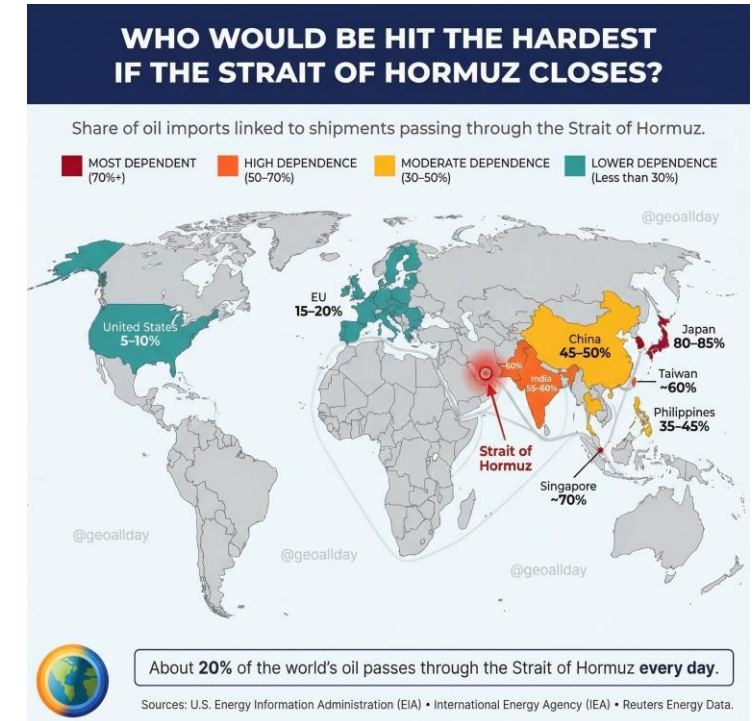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다.

이스라엘·미국의 일방적 공격 → 이란의 항전 지속

이란의 전략: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교란

수단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정, 드론 공격 - 기뢰 부설 위협 - 봉쇄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인상 - 선박 운항 중단 -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

최소 비용으로 해상수송·보험 서비스와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장애 야기 → 글로벌 경제 불안 촉발



지리적 병목 → 시스템 교란 병목 → 미국 압박에 대항

공급망으로 연결된 상호의존 시대에 병목(대체불가능성)을 기초로 한 경제안보 작동 방식

왜 경제안보인가?

상호의존의 무기화

자유주의 국제질서	탈-자유주의 국제질서
협력과 평화의 기반	경쟁과 압박의 통로/수단

- 무기화된 상호의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 경제안보

- 2023년 바이든 안보보좌관 Sullivan, "경제정책이 곧 안보정책"이라고 선언
 - 트럼프 2기 들어 경제안보 정책을 **공세적 대외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사용
 - 한국의 경제 안보 주요 경험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2018),
코로나 팬데믹(2019-20), 요소수 대란(2021)
- '경제안보' 정책 → **공급망 안정화** 중심으로 방향 설정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추진 체계 (1) - 현황

1. 공급망 3법의 핵심: “공급망 안정화”

- 「공급망안정화기본법」: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 (재경부)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산업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산업부)도 유사

2. 산업 경쟁력 강화 → 첨단 기술과 핵심 산업 보호·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and 역량 강화” (산업부)
- “첨단전략기술” 지정: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3. 국가전략기술 육성 →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개념 도입

-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 (과기부)
- “국가전략기술” 지정: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제8조 2항)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추진 체계(2) - 고려 사항

- **공급망 안정화** → 방어해야 할 품목이 너무 많음

- 2023년 공급망 취약품목: 1,946개 (전체 수입 품목의 18.6%)

- **경쟁력 강화** → 강화하려는 분야가 광범위함

- 산업부 지정 "첨단전략기술": 반도체 8, 디스플레이 4, 2차전지 3, 바이오 2, 로봇 1, 방위산업 1 등 6개 분야 19개

- 과기부 지정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 **공급망 안정화도, 경쟁력 강화도 안보적 시각 반영은 불충분**

-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을 구분할 필요**

- .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준: 경제적 효율성

- . 경제안보 정책의 기준: 안보적 필요성 → **대체불가능성**으로 전환

“대체불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대체불가능성 (1) – 무엇인가?

○ 시스템의 병목을 지배하는 능력

- 기술 체계, 산업 생태계, 공급망 구조 속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기능
- 경쟁력과 대체불가능성의 차이
 - **경쟁력: 장사가 잘 되는가?**
 - **대체불가능성: 없으면 안되는가?** → 첨단 반도체, 국제결제망, 희토류
- 대체불가능성이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경우에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는 높여 줌

○ 따라서, 대체불가능성은 산업·외교·안보가 결합한 국가 전략의 영역

→ 국가 차원에서 **대체불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국가 KOREA」의 비전

대체불가능성(2) – 싱가포르의 사례

< 참고: 싱가포르가 **대체불가능성**을 구축한 5가지 전략 >

- ① 지리적 병목을 시스템 허브로 확장
 - 말라카 해협의 지리적 이점을 세계 해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 ② **장기적인 국가 전략** →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는 전략 지속 추진
 - 해운 허브, 금융 허브, 글로벌 서비스 허브 건설 목표 유지
 - ③ **법적·제도적 신뢰 축적**
 - 안정적 법치, 국제 중재 시스템, 친기업 규제 행정,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도 유지 등
 - ④ 해양 서비스 생태계 전체 대상 **집중 투자** → “싱가폴을 거치면 편리하다”는 구조를 구축
 - 선박 금융, 해운 보험, 해운 중재, 선박 관리, 연료 공급 등 모든 서비스 기능을 유치
- **싱가폴은 항로보다, 항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제함으로써 대체불가능성 확보**
· “해운 서비스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은 북극 항로가 등장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

대체불가능성(3) - 선택과 집중

○ 대체불가능성은 ① 장기 전략, ② 제도적 신뢰, ③ 자본 투자 등 3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 구축 가능

①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 특정 산업/기능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② 제도적 신뢰

- 법·제도적 안정성, 정책 예측 가능성

③ 대규모 자본 투자

- 국가와 민간이 장기간에 걸쳐 자본을 투입, 투자 규모가 진입 장벽을 형성

○ 한국은 자원, 시장, 군사력 면에서 미국, 중국과 같은 거대국가가 아님

- 선택과 집중은 필수 → **“모든 것이 전략적이면, 어느 것도 전략적일 수 없다.”**

·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집중도가 낮아지고, 폭이 좁아지면, 집중도는 올라감

한국형 대체불가능성 구축은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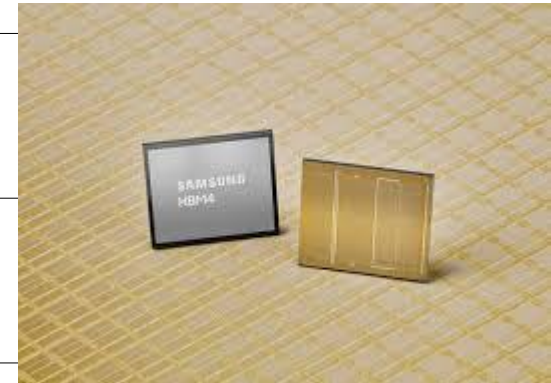
한국형 대체불가능성 구축 (1) - 대체불가능성 모델

모델	위치	분야	주요 사례
기술·산업형	기술·산업의 병목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대만
중립 허브형	시스템 노드	금융, 해운, 중재	싱가폴, 네델란드

-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 지정학적으로 '중립 플랫폼'이 되기 어려운 안보 환경에 있으므로, '중립 허브형 시스템 노드' 확보는 쉽지 않음
 - 한국은 **"기술·산업형 대체불가능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
 - **"동북아 에너지·해운·물류 플랫폼", "방산 MRO, 공동 생산 조정 허브"** 등 특정 전략산업 분야의 '운영 허브'를 2차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

< 참고: 기술·산업의 주요 병목과 한국의 위치 >

분야	통제국	한국의 대체불가능성 가능 영역
첨단 반도체 제조	대만(logic) 한국(memory)	메모리(HBM) 분야에서 비교적 근접
반도체 장비	네델란드(ASML), 일본	
초대형 클라우드 및 AI 연산 인프라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핵심 광물 정제·가공	중국	
해저 케이블 및 디지털 백본 인프라	미국 + 동맹체제	
해양 서비스·보험	영국, 네델란드(로테르담), 싱가폴	
국제금융·결제망	미국, 스위스	



한국형 대체불가능성 구축(2) - 기대 가능 분야

① 기존 역량에서 확장이 가능한 분야

- HBM, 첨단 패키징, AI 서버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 특수 선박 건조: LNG 수송선, 쇄빙선 등 → '원자력 쇄빙선'으로 확장도 검토 가능
- 고성능 배터리 소재 가공 및 제조

② 방산·조선·원전 등 전략산업의 복합 솔루션 모델 개발

- 인력 훈련, 유지·보수(MRO), 부품 공급, 기술 협력, 금융, 데이터 관리, 원전 연료 공급을 포함하는 복합 프로젝트로 추진
- 장기적 운영 시스템으로 묶을 때 대체가 어려워지고, 대체불가능성 상승

③ 제조·공정 역량 자체를 대체불가능성으로 강화

- 대규모 안정적 생산 능력
 - 한국은 제조업 스케일, 공정 안정성, 수율·품질 관리, 납기 예측 가능성, 공급망 통합 능력 등에서 강점이 있으며, 이를 전략 자산으로 전환 가능
 - 특히 대규모 양산 체제 운영 능력은 그 자체로서 진입 장벽을 형성

대미, 대중 관계 관리

대미, 대중관계 관리(1) – 선택보다 설계

○ 한국의 이중 노출 구조:

- 핵심 장비·설계 기술은 미국, 거대 시장·공급망은 중국에 연결

○ '전략적 모호성' vs '전략적 선명성' 논란

- 2025.8월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발언
. 경제 안보 대외전략의 과제는 **'선택'보다 '설계'**
→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목표



대미, 대중관계 관리(2) - 미국, 중국, 글로벌사우스, 북한

대미 전략

- 상호의존 심화 → **배제와 압박의 비용을 상승** → 자율성 공간 확보
- 한미일 플랫폼 구축 잠재력
 - 2025.7월 미일 무역투자협정과 11월 한미공동발표의 협력 분야 중첩
 -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 잠재력 개발 → 공동 R&D, 표준설정, 투자, 생산

대중 전략

- 시장·공급망 의존은 가까운 장래 해소 불가 → 위험 관리 구조 설계
- 선택적 분리와 이중화 전략 → **압박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구조**

글로벌 사우스

- 미중 경쟁의 완충 축 → **시장·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의 다변화**

북한 관리

- 남북 대립과 한미·한중 의존은 비례 관계

거버넌스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안보적 필요성**을 고려한 경제안보

①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 → 국가 역할 강화 필요

- R&D 방향 설정, 대체불가능성 구축 → 장기 계획과 자본 투자 필요
- 시장 기능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영역

②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강화

- 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기구가 아니라, 장기적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 배분이 가능한 추진 체제 필요 → 현재의 분절 구조 극복 필요

③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법제화 지원

-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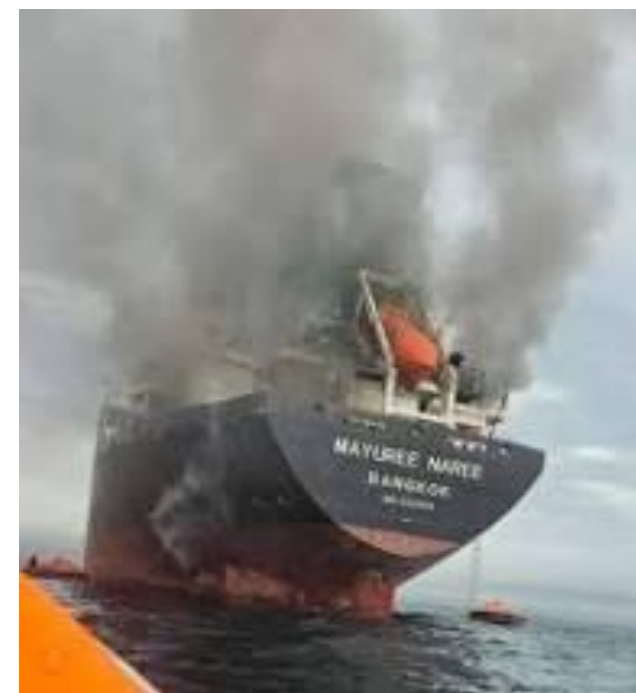
「전략국가 KOREA」

- 이란 전쟁은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 위기**를 상징
 - 통상 압박, 안보 부담, 에너지, 북핵
 - 미국 **전략자산(THAAD 포대) 중동 차출**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지리적 병목으로 생존 모색, 저항 계속
- 한국은 어떤 대체불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 회복력과 경쟁력으로는 부족

→ **대체불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경제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위 기

危機

감사합니다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2026년 3월 25일(수) 14:00-16:00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발제 2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한국 경제안보전략과 한미 통상협상 이후 과제

김 양 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2026.3.15 국민경제자문회의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 한국 경제안보전략과 한미 통상협상 이후 과제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목차

1. 문제 제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2. 경제책략 vs 경제안보전략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신뢰가치사슬(TVC)’
4. 관세 전쟁: 관세로 보호주의 진영 새판 짜기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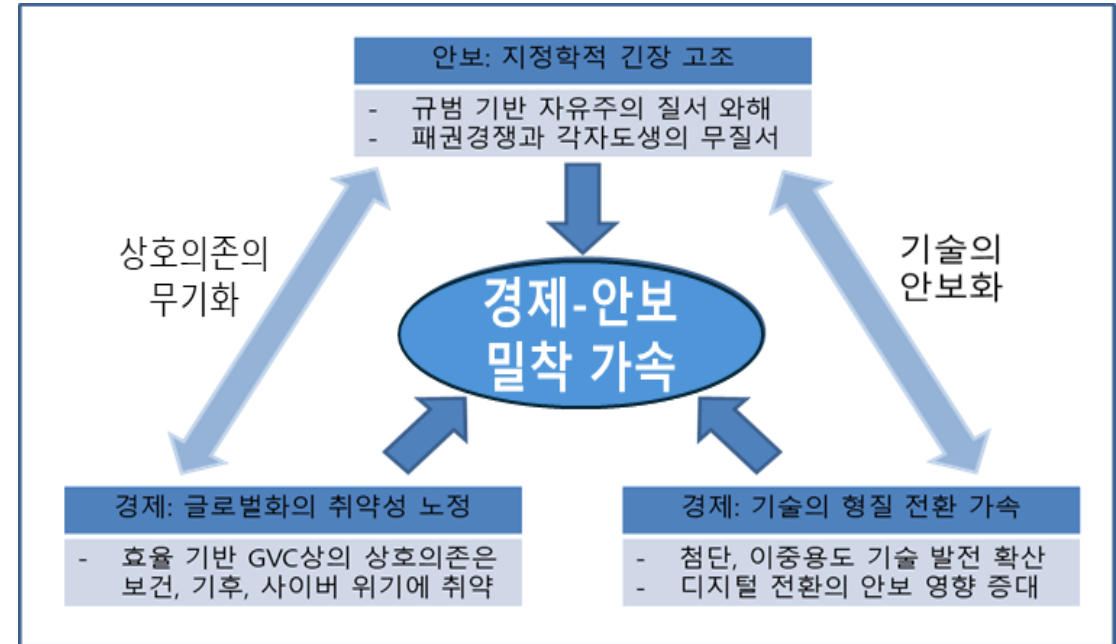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 한국 경제안보전략의 특징은 개별 전략의 각론이나 상세 액션 플랜이 아니라, **개별 전략을 관통하는 총론, '전략의 전략'에 해당하는 메타전략의 부재**
- 이는 외부충격 발생 시 사후적·일회적 반응을 반복해 온 주된 이유
- 미국발 관세전쟁을 경제책략 관점에서 '보호주의 진영화'로 재조명, **한국의 전략공간 창출**
- **한국의 경제안보 정체성에 기반한 국익 재정의와 '경제책략' 개념의 한국적 재해석**을 토대로, 한국 경제안보전략의 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이에 기반한 한미통상협상 이후 대응방향 모색

2. 경제책략 vs 경제안보전략

◆ 환경 변화: 경제-안보 밀착 가속 → 국가 차원의 신흥 리스크 대두

- 미중 패권경쟁과 교차하는 강대국발 두 개의 전쟁
 - 전후 최초,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동시에 전쟁 중
 - 그 이면의 미중 패권경쟁 심화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초연결된 경제·기술 구조의 취약성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쟁 당사국을 넘어 심대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안보 위기 야기
 - 원유, 천연가스에서 비료, 나프타, 헬륨까지



⇒ 수동적·방어적 경제안보전략으로는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한계, 새로운 접근 요구

2. 경제책략 vs 경제안보전략

◆ 경제안보전략의 출발점,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Baldwin, 2020)

- ‘국가책략(statecraft)’: “정부가 타국 행위자의 행동·태도·능력을 바꾸려고 사용하는 영향력 수단의 총체”
- 네 가지 기법: 선전·외교·군사·경제
- 오늘날 패권국은 경제·군사 책략 수단은 늘리는 반면 외교책략 수단은 줄이고 있어 경제안보 위협 가중
- ‘경제책략’: “화폐로 평가가능한 시장가격을 지닌 자원에 의존하는 영향력 행사 시도”
 - 영향력 행사의 3대 구성 요소: 수단은 경제, 대상은 국제 행위자, 행사 범위는 대상의 행동·신념·태도·의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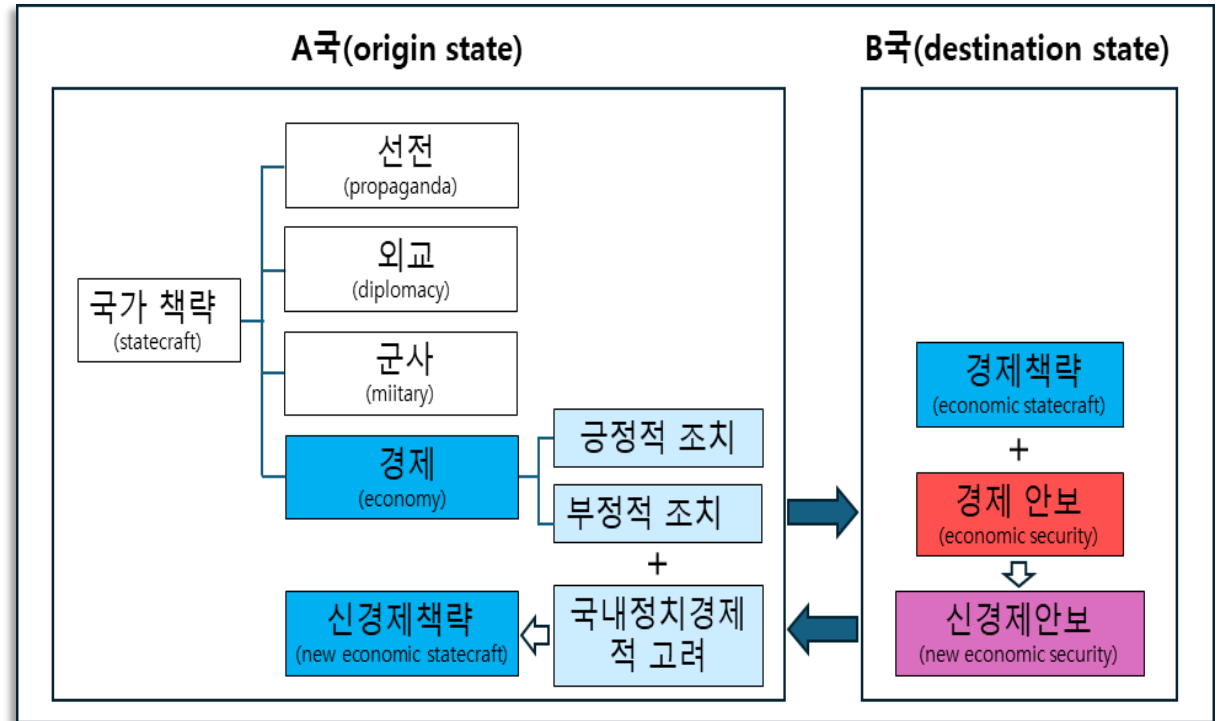
경제 책략 수단	긍정적 수단(당근)	관세, 최혜국대우, 구매, 수출입 보조금·라이선스, 원조, 투자, 자본 유출입, 세제혜택 등의 제공, 우대나 약속
	부정적 수단(채찍)	금수, 관세, 최혜국대우, 블랙리스트, 덤핑, 구매 등의 철회, 동결, 통제, 수용, 차별 등의 실행이나 위협

⇒ 강대국의 경제 및 군사 책략 투사에 직면, 비패권국은 비군사 책략 활용 방안 모색 필요

2. 경제책략 vs 경제안보전략

◆ 경제책략과 경제안보의 공진화

- 신경제책략(Helen Mitchell, 2023): 국내 정치경제적 고려를 가미한 신경제책략론
- 신경제안보전략(Aggawal and Reddle, 2025): 비패권국이 방어적·수동적 경제안보전략의 한계 절감, 국가책략 요소 가미한 신경제안보전략으로 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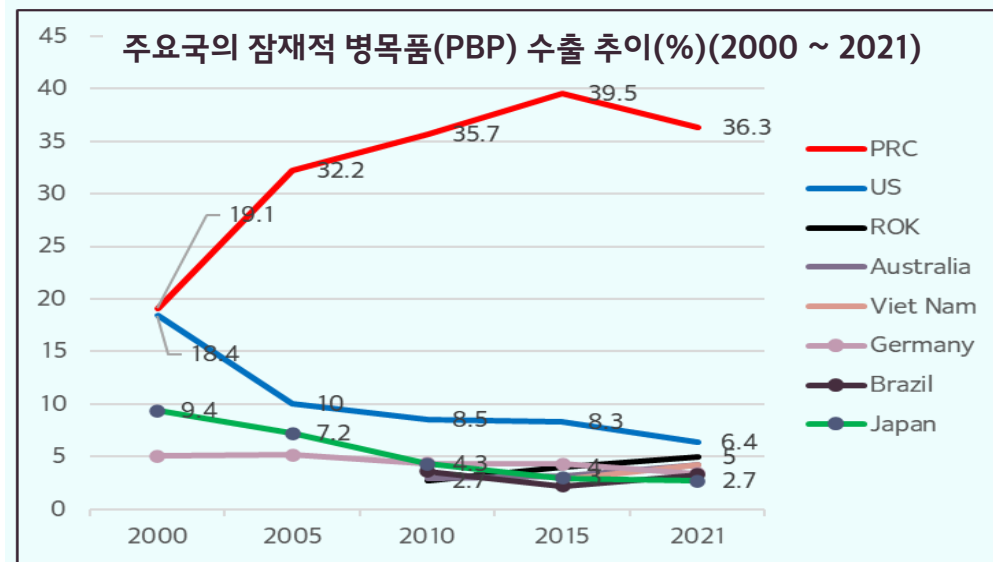


⇒ ‘신경제책략=신경제안보전략’적 접근: 비패권국 한국이 사용가능한 긍정적 조치 강화, 심대한 국익 침해 시, 부정적 조치 투사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는 새로운 시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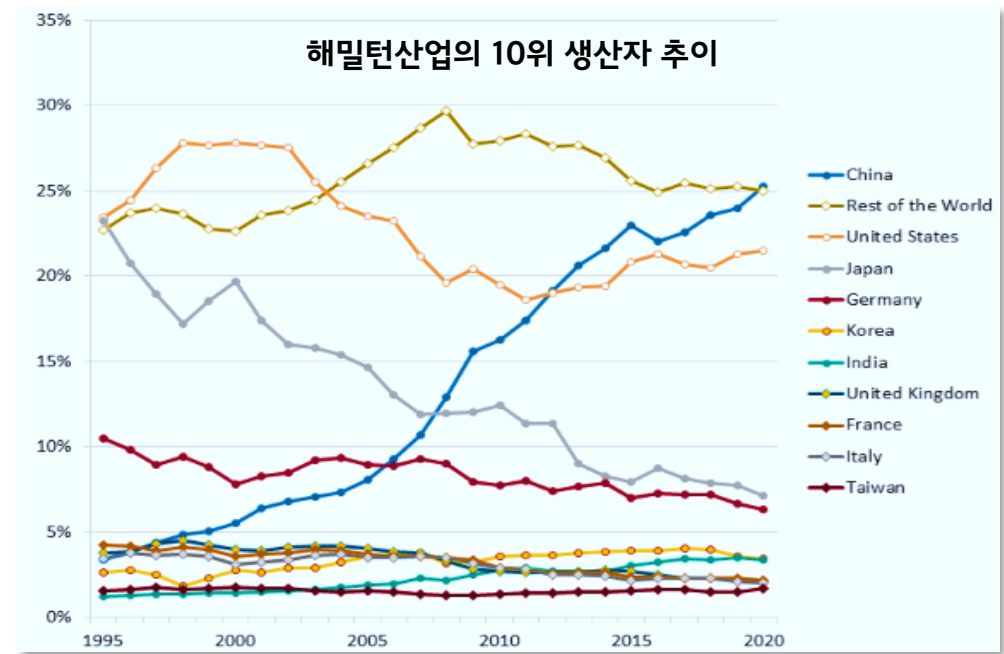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TVC

◆ ‘보호주의 진영화(blocification of protectionism)’ (김양희, 2022)

- 중국의 상호의존 무기화 역량 고도화로 미 단독의 대중 봉쇄 한계 절감
- 제3국의 1위 수출국수(미, 중): ‘48(25, 1)→‘24(38, 33). 1위 수입국수: ‘48(34, 1) → ‘24년(31, 80)(Our World in Data)
- 미 단독의 대중 봉쇄로 인한 제3국의 반사이익 차단



자료: WTO, 2023,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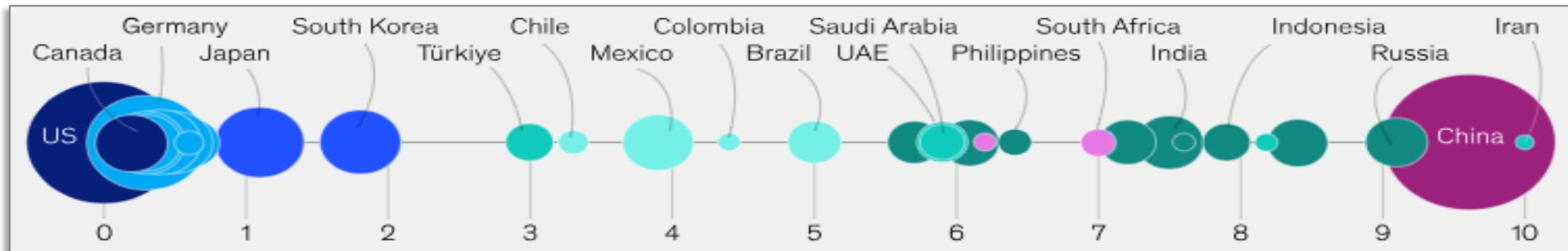


자료: <https://itif.org/publications/2023/12/13/2023-hamilton-index/>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TVC

- ◆ 대중봉쇄 전선의 다층화: ‘미국 vs 중국’ + ‘미국진영 vs 중국진영’ + α(중간지대)
 - 바이든 정부: AUKUS, Quad, TTC, IPEF, 글로벌공급망회의, ‘CHIP4,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층적 소다자협력체 구성(붉은 글씨는 한국 참여 협력체 표시)
 - 중국도 BRICS 확대(23.8. 6개국 합류), BRI 강화, 핵심광물 협력체 결성 등으로 보호주의 진영화
 - 러우전과 중동전 계기, 보호주의 진영화 가속, 한국에는 보호주의 진영에만 가둘 수 없는 경제안보적 딜레마 부각과 동시에 제조강국에 새롭게 기회의 창이 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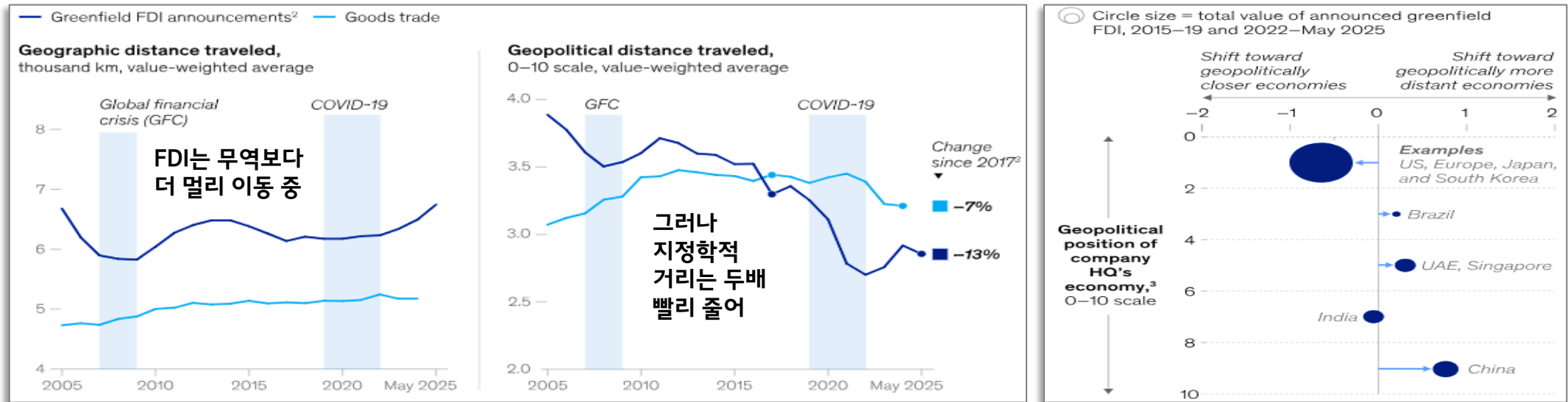
누가 어느 진영에 속하나? - UN 상임위 투표로 측정된 지정학적 거리(2005-2022)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Sep 22, 2025, “[The FDI shake-up: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today may shape industry and trade tomorrow](#)”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TVC

- ◆ 보호주의 진영화 현상은 특히 첨단분야 FDI에서 부각([McKinsey Global Institute, 2025](#))
 - 첨단반도체,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센터, 제약, 로봇 등
 - 2022-24년 평균 대비 '25 중국의 수출 상대 중 미·일·EU27은 각각 155%, 10%, 6% 감소([Global Trade Alert, 2025](#))
 - 전통적 보호주의 + 느슨한 경제안보 협력 네트워크: 유동적·가변적 전선, 중간 지대, 진영간 비대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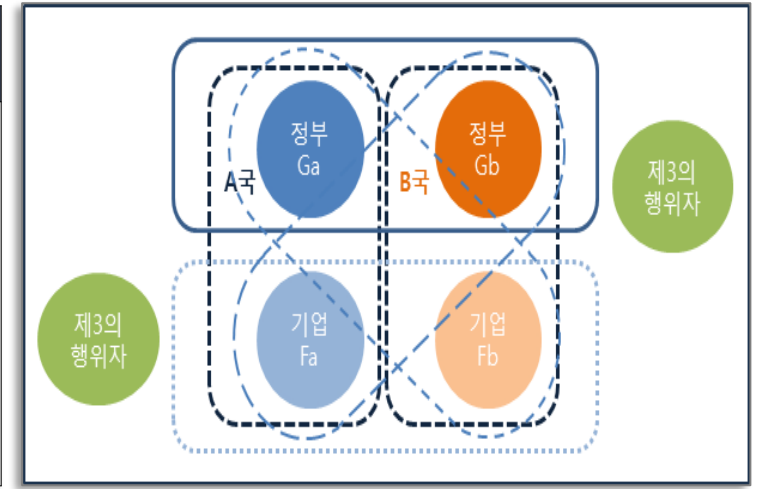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Sep 22, 2025, "[The FDI shake-up: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today may shape industry and trade tomorrow](#)"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TVC

- ◆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김양희, 2022):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 기반 공급망 재편목표
 - 바이든 정부('21.2) 10대 품목: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군수, 보건제약, ICT, 에너지, 운송, 농식품
 - “기존 공급처를 신뢰할 만한 많은 나라로 바꾸면 신뢰할만한 무역 파트너의 리스크도 낮출 것”(Janet Yellen, 2022)
 - GVC 재편: 기존 GVC 중 일부 품목이 특성별로 RVC, DVC, TVC 등의 가치사슬로 분화
 - 2017-2023 미국 총수입 중 중국 비중: 무역액 기준 24% → 15%, 부가가치 기준(최종 소비) 26%→23%(McKinsey Global Institute, Jan 27, 2025)
 - TVC를 둘러싼 복잡한 행위자 연결망 감안 시, 채찍 중심의 경제책략으로는 안착 기대 난망

가치사슬 (재편 수단)	해당 품목(예시)	생산 거점	향후 전망	제품 기술	작동 원리	정부 관여
GVC (offshoring)	- 레거시 반도체(28nm 이상)·배터리 - 범용 소비재(의류, 저가 가전)	세계	감소	민용	효율 (경제성)	소
RVC (nearshoring)	- 소비지 인접 생산품(자동차 부품) - IRA, CBAM 대응(EV배터리·철강)	시장 인접국	↕	↕	↕	↕
DVC (reshoring)	- 이중용도·횡단기술(반도체, AI)	국내	증가	이중 용도	회복력 (안보)	대
TVC (friendshoring)	- 국방·인프라(국방반도체, 통신)	동맹· 우방				



3. 미국의 경제책략: 보호주의 진영화·TVC

◆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진영화 2.0’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Pax Silica, FORGE, 2026NDAA, AI Action Plan, Dominance Act, ‘Aligned partners’ 등
- 보호주의 진영화 2.0의 전략적 함의: 신냉전론, 제국주의론과 달리 진영내 일원의 능동적 역할 가능
 - 한국은 미국 첨단 제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는 중국의 한국 추격/추월 막는 방파제
- ⇒ 보호주의 진영화의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위협요인의 최소화 병행이 관건

	보호주의 진영화 1.0(바이든 정부)	보호주의 진영화 2.0(트럼프 2기)
목표	- 대중 기술 및 산업 패권 우위 확보 - 친동맹 중심 제조업/공급망 재편	- 대중 기술 및 산업 패권 우위 확보 - 관세 및 상호주의 기반 협상력 강화
사례	IPEF, AUKUS, Quad, TTC, MSP 등	MSP(FORGE), Pax Silica, AI Action Plan 등
경제책략 핵심 수단	- 긍정 조치: IRA, CHIPS 기반 보조금 - 부정 조치: 수출통제 등	- 긍정 조치: 거래·조건부 시장접근 - 부정 조치: 고관세, 경제 강압, 상호의존의 무기화
반대 진영에의 대응	- 부분 봉쇄 + derisking	- 전략산업 봉쇄 + 비전략분야 조건부 거래?
진영 내 관계	- 소다자 > 양자	- 양자 > 소다자
GVC 재편 우선순위	- DVC > RVC + TVC	- DVC >>> RVC + TVC

4. 관세 전쟁: 관세로 보호주의 진영 새판짜기

- ◆ 관세전 1라운드: 미국, 미측 보호주의 진영의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전방위 압박
 - 대중국 관계: 희토류 규제, 저하된 대미의존도, 세계경제 영향력 등 복병 만나 다시 TACO
 - **대우방 관계: 미 보호주의 진영의 양대 축, '15클럽'과 USMCA의 북미요새화**
 - 비차별무역원칙과 MFN 세율은 WTO 회원국간 다자무역질서에서 15클럽내 배타적 질서로 왜소화
 - 연방정부 '25 관세수입 \$3000억(전년비 3.75배), '26 \$2040~2460억 추정

협상 상대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 관세		대미 투자	미국산 구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 +16%(26-11-20까지), 자동차/부품 25%+a(긴급관세) • 일부 품목에 301조, 232조, AD/CVD 기반 관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전략분야 투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 등 농산물
15클럽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 15% • 자동차/부품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사실상 대만 parity? • 의약품 15%, 항공기/부품 한미FTA 준수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억 MOU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무기, 항공기, 농식품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의약품 MFN, 항공기/부품 WTO-CAA 준수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억 MOU 체결 +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의약품 MFN, 항공기/부품 MFN(사실상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억 민간기업에 권유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무관세(미국내 생산시설 건설중 생산능력의 2.5배까지)+우대세율(초과분), 완공후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 의약품, 항공기/부품, 대체불가 천연자원: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500억 투자 보증 • 최소 \$2500억 FDI 	
북미 요새	멕시코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 대미 35%(에너지 일부 10%), 멕시코 25% • USMCA 준수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MCA 검토 통해, '2025 NSS 기반 미국 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재정의된 서반구의 중핵 역할 강화 		

4. 관세 전쟁: 관세로 보호주의 진영 새판짜기

◆ 한미 경제안보 협상: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 미국은 대한 안보 우산 제공을 거래·조건부 보장으로 전환, 비용 분담 압박
- 한미 FTA는 한국에만 통하는 일방통행로로 전환
- 미국 시장 접근 시 고관세,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 압박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관세: 15%(11.14부), >15%의 경우 한미 FTA 충족시 15%, 미충족시 해당 MFN 세율• 품목 관세: 자동차/부품 15%, 목재 15%, 항공기/부품은 KORUS 충족 시 철강/알루미늄 관세(50%) 무관세• 한국의 대미투자 MOU 기반 3500억 달러(조선분야 1500억 달러 포함), 트럼프 임기내 대미 FDI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항공기 103대 360억 달러 규모 구매• 한미 FTA공동위원회: NTB 논의, 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차 MRA 한도 폐지,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 경제번영 보호: 관세회피 대응 협력, 불공정/비시장적 정책 해결 협력, 투자규정 강화 등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동맹 현대화: 확장억제 재확인, 핵협의그룹(NCG) 등과 협력, 국방비 GDP 3.5%로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권 전환 협력,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국방 AI 협력• 한반도/역내문제 공조: 한반도와 인태지역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삼각파트너십 강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수호• 해양/원자력 협력: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123 협정 기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핵잠수함 건조 승인

4. 관세 전쟁: 관세로 보호주의 진영 새판짜기

◆ 미 보호주의 진영 내 한국 지위(Carnegie Endowment for Int'l peace, 2025)

- 한국은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 보호주의 진영 내 핵심 파트너: '15클럽' 편입 배경
 - 특히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회복력 제고, 첨단 대중 기술 유출방지 측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
 - 그러나 분단국가 한국은 7대 동맹 중 미국에 '대중 억제 위한 군사/기지 제공' 협력이 힘든 유일한 동맹
- 한미 경제안보적 상호의존 고착 우려: '15클럽' 일원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양면성 인식

	반도체 공급망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첨단기술 대중 유출 방지		對중 기술 FDI 제한		대중 억제 위한 군사·기지 제공		미·동맹 무기 공동 개발		미국 국제질서 구상 지원		Global South 내 중 영향력 견제		중요도/협력가능성 순위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중요도	협력 가능성	매우 중요	매우 높음
일본	■	■	■	■	■	■	■	■	■	■	■	■	■	■	■	■	7	4
호주	■	■	■	■	■	■	■	■	■	■	■	■	■	■	■	■	2	2
한국	■	■	■	■	■	■	■	■	■	■	■	■	■	■	■	■	4	4
필리핀	■	■	■	■	■	■	■	■	■	■	■	■	■	■	■	■	0	0
영국	■	■	■	■	■	■	■	■	■	■	■	■	■	■	■	■	3	2
독일	■	■	■	■	■	■	■	■	■	■	■	■	■	■	■	■	3	0
프랑스	■	■	■	■	■	■	■	■	■	■	■	■	■	■	■	■	2	0

주: 8대 분야 각 칼럼의 중요도 칸의 색은 ■ 매우 중요 ■ 다소 중요 ■ 중요하지 않음의 색은 각각 ■ 매우 높음 ■ 다소 높음 ■ 다소 낮음

자료: Christopher S. Chivvis et al, 2025, "Legacy or Liability? Auditing U.S. Alliances to Compete with Chin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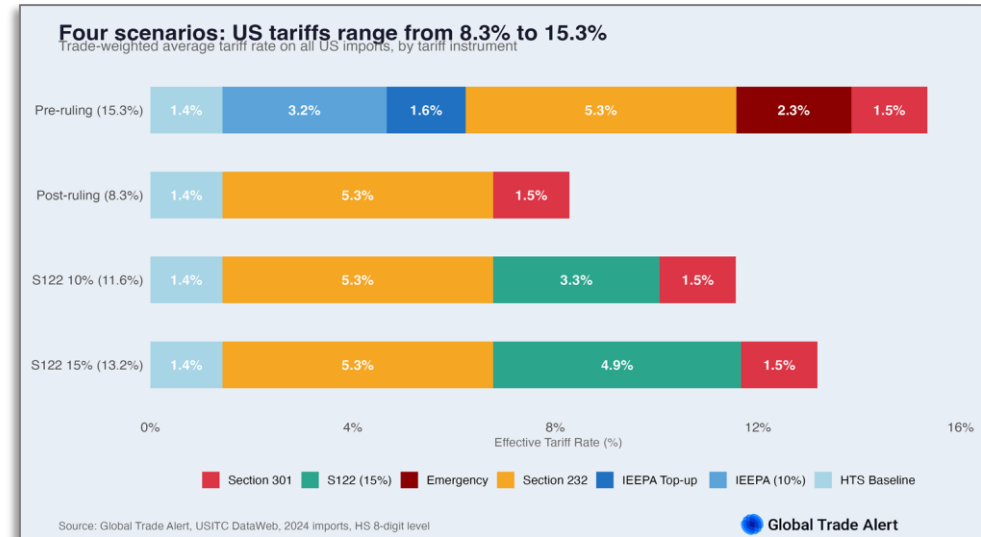
4. 관세 전쟁: 관세로 보호주의 진영 새판짜기

◆관세전 2라운드: IEEPA 기반 상호관세 폐기 이후 단기 불확실성 확대

-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26.2.24): 관세조치의 법적·정치적 정당성 타격, 122조 관세로 공백 메우기
- 122조 기반 일괄 10% 관세 발효(2.24 ~ 7.24), 15%로 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중동전 발발로 불확실
 - 미국 무역가중평균세율: 2.4%('25.1) → 15.3%('26.1) → 11.6%(10%, 122조 기반) → ?
 - 122조 기반 관세 종료 이후 대비 위해 301조 기반 조사 개시('26.3.11)

유형	대상	근거법
국별 관세	멕시코, 캐나다 (하날)	IEEPA
상호 관세	기타 국별(69개국)	
품목 관세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무역 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구리 및 파생상품	
	목재	
	소파, 가구 등	

폐기



자료: <https://globaltradealert.org/reports/S122-US-Tariff-Estimates>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현주소 진단

• 각론은 있되 총론은 취약

- 공급망, 첨단기술 보호·개발, 전략산업 육성 등 개별 대응 관통하는 경제안보전략 즉 메타전략은 초기 단계
- 개별법간 중복·상충·사각지대 발생, 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 곤란([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 2025](#))

• 반응은 하되 주도는 취약

- 지침·원칙·우선순위·로드맵 불명료로 일회적·사후적 대응 반복

• 정책별 협업은 있되 분업·조정은 취약

- 경제안보 고유의 부처횡단적·다면적 성격으로 인해 다수의 부처, 위원회, 유관기관 간 조직적·체계적 업무 분장과 연계·조정이 곤란해 주도권 갈등으로 비화 가능성 내재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생소한 경제안보 현안 해결의 지침 수립

-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체화: **한국의 정체성 분석 기반, 한국의 필수 국익 정립**
-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에서 출발, 강점 강화, 약점 최소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
 - **강점) 스마트파워(Joseph Nye) = 하드파워(제조·수출·방산의 전략적 결절국) + 소프트파워(민주주의·문화·디지털)**
 - **약점) 대외의존적 비패권국**
- ‘보호주의 진영화’ 환경을 위협요인에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SWOT 분석)

<p>강점(S): 스마트파워(전략적 결절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25 WIPO 글로벌혁신지수 4위) -수출(‘25 세계수출 7위) -방산(‘25 5위, ‘20-’24 10위) -소프트파워(‘26 브랜드파이낸스 11위) 	<p>약점(W): 대외의존적 비패권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성장을 둔화 -대외의존성(기술·공급망·자원·시장) -국내 첨단제조 기반 쇠퇴 -대미 안보 의존
<p>위협(T): 보호주의 진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주의 진영화로 규범·표준·시장 분절화 -미국 동맹에의 연루·방기 위험 -인접국 중국의 경쟁력 추격·추월 -분단국의 지역·지구적 차원의 안보 위기 -AI 등 이중용도 첨단기술의 급속 발전 	<p>기회(O): 보호주의 진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주의 진영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제조업과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안보 위기 상시화로 방산 수요 급증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 **경제안보 목표 기반 레드라인 설정으로 ‘보호주의 진영화’ 활용이 자율성 약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국익 ≠ 관익 ≠ 사익, 공공선에 합치하는 경제안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 헌법적 가치·권리와의 정합성 모색
- 관익·사익과의 이해상충 관리 및 통제
- 메타전략(자/강)에 기반한 정책 평가 기준 확립
- 경제안보 거버넌스 내 견제와 균형 장치 강화
-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정보 공개와 참여 확대
- 상호주의가 관철될 수 있는 대외 환경·규범 설계
- 다층적 대외 협력 및 공조 참여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비패권국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안보전략 정립

- ‘공급망 기본법’의 경제안보 개념은 다분히 수동적·방어적 서사에 기반
- 경제안보전략의 확대된 정의와 국가안보전략과의 관계
 -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전략”
- 경제안보전략을 군사, 외교와 동급의 국가안보전략 중심축으로 격상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시행 2024. 6. 27.]

제2조(정의)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한국의 경제안보적 정체성에 기반한 경제안보전략 목표: 自/强 추구

- ‘自(자율성)’: 대외 충격에 일방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 경제안보
 - ‘强(강인성)’: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대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절점(node) 역할
 - 자율성 확보를 넘어, 전략적 결절국 지위까지 포함하는 경제안보 목표로 시야 확장
 - 自) 자율성(Autonomy) 제고: 특정 국가·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 구축
 - 핵심 품목기술의 단일국 의존도 상한선 설정
 - 强) 강인성(Strength) 제고: 전략적 결절국가(strategic nodal state) 위상 강화
 - 핵심품목의 내재화·고도화: AI, 디지털 역량, 지역균형성장파 연계한 국내제조혁신생태계 강화
 - 긍정적·포용적 경제전략 선도: 긍정적 경제 수단을 활용, 자/강 실현 + 포용적 협력
 - 비패권국 지위 + 소프트파워 활용: ODA, 기술·투자·무역 통해 중견국·글로벌 사우스와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 규범 기반 긍정적 경제전략 도구 사용, 완곡하고 절제된 외교문법 구사
-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한국 경제안보전략 추진 방향: 비패권국형 전략 추구 = 신경제책략 + 신경제안보전략

- 신경제책략(긍정적·포용적 경제책략 수단 중심) + 신경제안보전략(능동적·주도적 경제안보전략)
- **실제 정책 추진 시 ‘경제안보 자/강’ 평가 기준 내장**
- 관련 정책의 규범·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로 대외신뢰도 제고
- 근거 기반 설계·실행·평가·피드백 제도화
- **경제안보 도구 상자(Tool kit) 총망라 및 고도화: 한국의 최대 도구는 제조혁신역량**
 - 긍정적 조치와 부정적 조치로 유형화
 - 부정적 조치는 레드라인 상황에 한정,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 비패권국 한국은 긍정적 조치의 전략적 활용에 주력

5.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설계

◆ 국가 경제안보 역량 강화

- 지정학적 위협은 국가 단위의 취약성 증대 →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역량 중요
- 경제-안보 밀착으로 통치(government)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 증대
 - 거버넌스의 4대 축: 정책력·조정력·연계력·외교력
- 경제안보 문해력(literacy) 증진
 - 경제안보전략 ≠ 산업정책
 - 경제안보전략 > 산업경쟁력 제고
 - 경제안보전략 < 국가안보전략
- 정부·민간의 경제안보 문해력 증진 및 역량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 단기) 경제안보 정보포탈 서비스 제공
 - 중기) 정부 산하에 부처횡단적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립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 미국의 경제책략 분석 프레임: 관세 전쟁 및 미중패권경쟁을 국가책략의 맥락에서 접근

정책 차원	정책 논리	- 정책 목표, 명분, 우선순위의 일관성 - 국내외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작동 논리	- 보호주의 조치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 정책 실패·부작용 발생 시 조정·수정 가능성
행위자 차원	국외	- 동맹·우방 - 경쟁국/적대국 - 완충지대·중견국
	국내	- 생산자(산업·부문) - 소비자 - 제3행위자
	미 정부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관세전쟁의 정책논리: 패권 쇠퇴기의 미국에 관세는 다목적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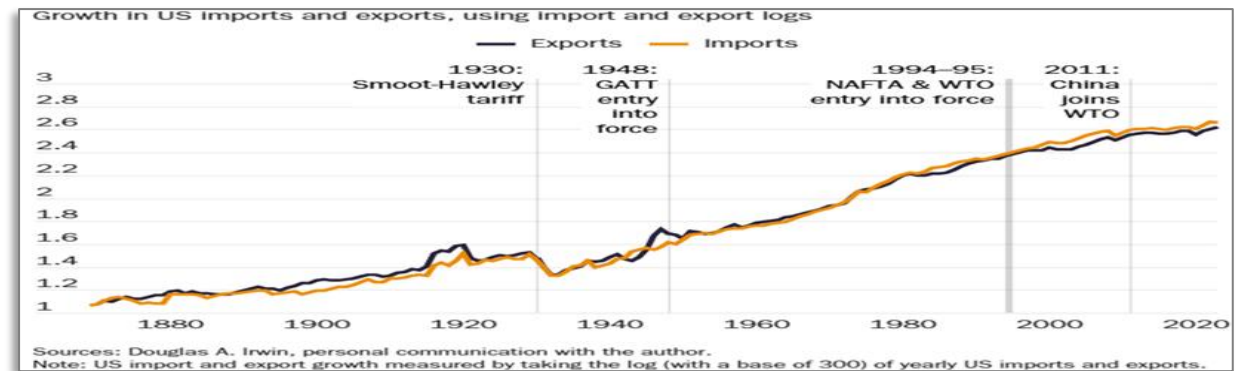
- 재정 정책 수단: 감세 패키지(OBBA)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보전
- 경제 책략 수단: 모든 대외 현안 해결에 남용(마약, 이민, 군사 등)
- 국내통치 수단: 관세는 여타 보호 조치에 비해 지지자에 성과 과시 용이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 관세전쟁에 내재된 3대 난제 해소 여부가 관건

① 정책논리: 무역적자 해소 곤란한 미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 무역수지 = ‘저축-투자 불균형’: 투자 축소(저축 증대), 달러 패권 유지하는 한 무역적자 해소 곤란
- 미국 기업의 GVC 참여 실태: ‘수출+수입’ 기업이 총수출의 84%, 총수입의 91%(제조업체는 ‘수출+수입’ 기업이 총수출의 53%, 총수입의 40%) 담당(Fariha Kamal, 2024)
- ‘러너 정리(Lerner symmetry theorem)’: 수입 없는 수출 불가능(Veronique de Rugy, 2025)
 - 관세 인상 → 수입 감소 → 무역적자 감소
→ 국내생산 증대 → 수출 증대??
 - ‘수입관세=수출세’: 관세 인상 → 수입 감소
→ 외화수요 감소 → 통화 절상 → 수출 감소!!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② 작동논리: 빈번한 'TACO'로 상수가 된 불확실성 해소 여부

-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公約(인플레이션 진정, 전쟁 불가)은 空約?
 - 미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 시 즉시 관세 조정: 관세부과 예외품목은 50%, 122조 관세 예외품목 다수
- 미국이 설계한 비차별 무역원칙 파기의 도미노는 불확실성에 따른 고비용 공급망 리스크 증폭

③ 정책 논리와 행위자 간 모순: 동맹과의 '보호주의 진영화' 절실하나, 동맹에 대한 거래 관점의 접근은 장기에 동맹의 미 보호주의 진영 이탈 자초(Farell & Newman, 2019)

- 행위자-해외) '15클럽'과 USMCA 회원국의 대미 공조 수준과 범위가 관세전 지속 좌우할 핵심 변수
 - 행위자-국내) 미국 민주주의 후퇴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균형 곤란
 - ⇒ 동맹도 일정 수준의 '보호주의 진영화'에 호응하나, 미국의 채찍 위주 접근은 신뢰 저하,
동맹의 비용 증대라는 구조적 설계 결함을 내재
-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 ◆ 한국 경제안보전략 목표에 기반한 한미통상 협상 목표와 전략 수립
 - 양보불가 핵심 국익: 대외의존적 제조·통상 강국 한국은 규범 기반 자유·공정한 국제 질서 절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전략 도구상자 총망라: 핵심은 제조역량
 - 관련 정책에 자/강 평가 기준 내장, 근거 기반 정책 추진 및 평가와 피드백 제도화
- ◆ 自) 자율성 제고: 호혜적 동맹관계 확립 + 독자적 억제력·위기대응 역량 강화
 - 미 제조업 재건 필수 파트너 한국과의 FTA와 USMCA의 동등성 확보(*USMCA parity*)
 -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BATNA로 한미 FTA 파기 상정
- ◆ 强) 강인성 제고: 핵심 TVC에서 전략적 결절국가(strategic nodal state) 위상 강화
 - ‘보호주의 진영화’를 지렛대로 특히 제조역량 강화
 - 미국 제조업 재건과 대중 견제에 필수불가결한 한국의 대미 전략적 가치 제고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 ‘보호주의 진영화’ 활용하되 진영내에 갇히지 않도록 유념

-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안정성’, ‘상업적 합리성’ + 경제안보적 국익 기준 추진
- **중·러와의 협력은 경제논리 아닌 안보 프레임으로 설명하되, 경제수단 통해 리스크 관리**
- 가치사슬 유형별 포트폴리오 설계: GVC·RVC·TVC·DVC 식별 및 배치
- **방산역량을 에너지 안보 강화, 안보협력 다각화 위한 경제책략 수단으로 신중히 활용**

◆ ‘긍정적·포용적 경제책략’ 선도: 이를 통해 비패권 중견국의 우호국 네트워크 확장

- **한국의 제조역량을 긍정적 경제책략 수단으로 대외협력에 적극 활용**
- 비패권국·글로벌 사우스와 규범기반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 **MPIA(다자간 임시 상소중재 약정) 참여 검토: 2026년 현재 약 50여 회원 참여, MPIA 첫 분쟁 해결 사례 탄생(“콜롬비아, EU 감자튀김 관세 철회”, 2026.3.19)**

6. 한미 통상협상 대응방향

◆ 미중 패권경쟁을 둘러싼 행위자 개념 정교화 및 지역 재정의

- 다양한 행위자(정부·의회·기업·노동·지역사회·해외 파트너)에 대한 맞춤형 연대와 공조 설계
- **지역 재정의: 지역의 경계를 지리적 범위를 넘어 지정학적 범위로 확장**
- RVC보다 TVC에 강점 가진 한국 특성 감안, RCEP 활용한 중국과의 RVC 구축
- **CPTPP 가입: CPTPP-EU 협력, USMCA 연계, 중남미 시장 진출 등 겨냥한 복합 교두보**
 - **멕시코는 FTA미체결국에 고관세 부과 예정**

◆ 강대국 정치의 시대, 집합적 협상력 제고 위한 대외협력에 나서는 정치적 결단과 용기

- EU-CPTPP 간 슈퍼 블록 형성 논의, MPIA 확대, 미국의 중동전 관여 압박에 대한 국제 공조 등 중견국간 집합적 협상력 강화, 규범 기반 국제질서 회복 움직임 참여로 국제 고립 탈피
- **대의명분 뚜렷하고 한국 국익에 합치하는 중견국 연대 적극 참여**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2026년 3월 25일(수) 14:00-16:00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발제 3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한국의 핵심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산업정책 과제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경제안보 관점의 한국 핵심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산업정책 과제

- 이 준(Ph.D.)
-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CONTENTS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6.3

- 1 **경제가 안보(安保)인 시대**
- 2 **전략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 3 **우리 산업의 현 주소 - 우리 경제안보는 안녕한가?**
- 4 **경제안보 시대, 우리 산업의 길은?**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12

1. 경제가 안보(安保)인 시대

경제안보! 글로벌 산업·통상의 새로운 조류

- ◆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Peter Navaro, 2018)
- ◆ 美↔中 간의 이슈를 넘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확대

경제가 안보(安保)인 시대

≫ 경제안보 → 21세기 글로벌 경제·산업 질서를 규정하는 패러다임

- 격화되고 있는 美·中 간 전략경쟁, 지구촌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정 리스크, 주요국의 기술·자원 안보화 등의 흐름으로 가속화
- ❖ 2006년 볼리비아가 리튬을 국유화한데 이어, 2023년에는 칠레, 아르헨티나도 국유화 행렬에 가세 (이들 3국의 리튬 보유량은 전세계 53% 수준)

≫ 제1기 트럼프행정부 출범(2017) 이후 본격화

-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기조 하에 기술, 산업, 통상, 국방안보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국가 의제화
- 경제안보적 기조 하에 중국에 대한 경제를 본격화하면서 차별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수입금지, 투자심사 강화 등 제재 조치를 시행

경제안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 역사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은 항상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 대상
 - ✓ (1900년대 초반) 전기와 자동차에 대한 美-英 간 전략경쟁
 - ✓ (1950-70년대) 우주, 항공, 원자력에 대한 美-蘇 간 전략경쟁
 - ✓ (1970-80년대)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美-日 간 전략경쟁

팬데믹, 지정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기조로 확대

≫ 팬데믹 → 필수 공급망의 대단절 초래

-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 의료기기, 백신 등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재화의 공급망이 단절
- 자동차 부품(반도체, 와이어링하네스 등) 등 산업 필수 재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

미국과 EU의 코로나 백신 수출통제 사례

국가	주요 내용
EU	•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월에 코로나19의 역외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백신 사전 수출허가제’를 도입
미국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여 백신 제조용 재료 수출 통제

≫ **신냉전** →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상호 안보화 조치를 견인

- 러-우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 현실화와 식량, 반도체 소재 등 공급망의 무기화 및 단절은 주요국들이 경제의 안보화 기조를 강화하게 된 계기를 제공

산업정책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 경제안보

- ◆ 저물어 가는 WTO 체제 (→ **턴베리Turnberry 체제 도래**) 그리고 더 이상 신흥국의 전유물이 아닌 산업정책
- ◆ **관대함이 사라진 미국**: 양손에 든 **통상(관세)** & **산업(보조금&조세지원)** 정책

채찍 (통상정책 → 관세)

» 상호관세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97)
- 국가 안보 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품목관세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1962)
-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양이나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품목	관세	비고
자동차	25	4.3 발효
자동차 부품	25	5.3 발효
철강 및 철강제품	50	- 3.12 25% 발효 - 6.4 50% 인상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	50	- 8.19 407종 제품 추가
구리 및 구리 반제품/제품	50	8.1 발효

반도체 품목관세('26.1.14)		주요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2단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으로 확대 가능 •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검토 	

당근 (산업정책 → 보조금&조세지원)

»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이후, 일관된 행보와 신속한 입법

- 4대 품목 & 6대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급망 점검 이후, 이들의 공급망 재구조화를 위한 후속 행보를 신속하게 전개

»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반도체와 과학법)

- 527억 달러 보조금 + 투자세액공제 25% + 對중국 가드레일 조항 →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의 지각 변동 촉발**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대응에 3,690억 달러 투자
-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 →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의 전면적 재편 가속화**

»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 「반도체와 과학법」 상의 직접 보조금 규모 축소 (총 투자비 10% → 4%)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상향 (25% → 35%), ▲적격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미국 내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영구화 등

이미 글로벌 기업은 미국의 정책에 반응 중

- ◆ 2020년 ~ 2025년 기간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는 130건 이상 진행 중
- ◆ 총 투자 규모는 약 6,000억 달러 이상 (약 880조원)

신속하게 추진 중인 미국의 산업정책

» 美 보조금 → 글로벌 반도체 투자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유도

- 2020년 이후, 반도체 및 후공정(ATP) 신규 설비투자 대부분이 미국으로 집중

주요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동향

국가	인센티브 규모 (Billion \$)	인센티브 방식	2020년 이후 신규 Fab and ATP 투자 건수
미국	39	보조금	26
중국	142	펀드	~30
EU	47	보조금	8
일본	17.5	보조금	4
한국	55	조세지원	3
대만	16	조세지원	7

자료 BCG&SIA(2024)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현황

기업	국적	보조금	기업	국적	보조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미국	1.62억 달러	TSMC	대만	66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15억 달러	삼성전자	한국	64억 달러
인텔	미국	85억 달러	마이크론	미국	61.4억 달러

자료 언론기사 종합

글로벌 산업 지형은 이미 변화 중

» 미국에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 중

- 소자, 소부장 기업들은 이미 반응

미국의 주요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

기업	지역	분야	투자 규모 (10억 달러)
Global Foundries	Malta, NY	semiconductor	15.1
Intel	New Albany, OH	semiconductor	28
Intel	Hillsboro, OR	semiconductor	36
Applied Materials	Sunnyvale, CA	equipment	4
Global Wafers	Sherman, TX	materials	7.5
Micron	Clay, NY	semiconductor	100
Micron	Boise, ID	semiconductor	50
Samsung	Taylor, TX	semiconductor	37
SK Hynix	West Lafayette, IN	packaging	3.87
Texas Instrument	Sherman, TX	semiconductor	40
TSMC	Phoenix, AZ	semiconductor	165

자료 SIA(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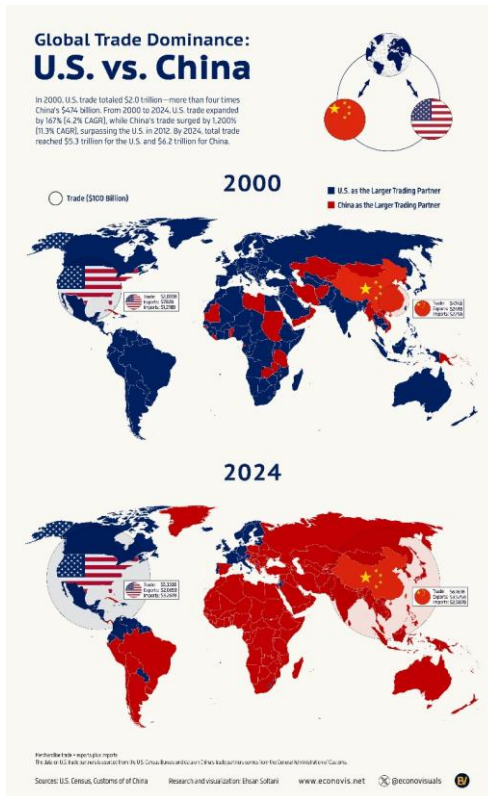
» 예정된 미래 → 최선단 반도체의 글로벌 지형 변화 불가피

- ❖ 최선단 국가별 점유율 전망: (미국) 22년 0% → 32년 28%, (한국) 22년 31% → 32년 9% 자료: BCG&SIA(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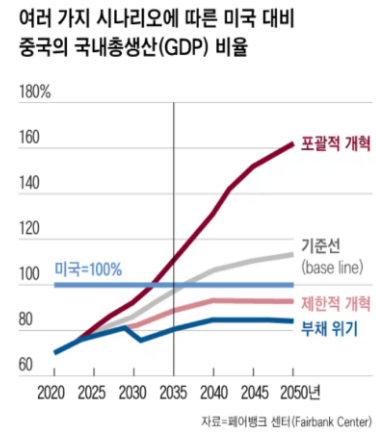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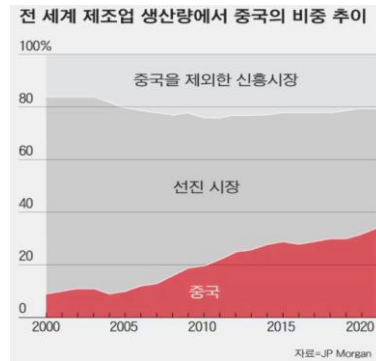
경제안보는 왜? 글로벌 제조업 패권에 근접해 가는 중국

- ◆ 차원이 다른 경쟁자! 中國
- ◆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갈겠다 (中 리커창 총리, 21년 悭人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지형



자료 언론기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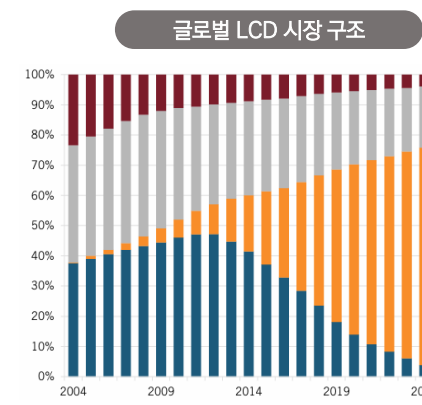
중국의 산업정책은 차원이 다르다!

» 상식을 벗어나는 산업정책 → 중국 제조업 고속성장의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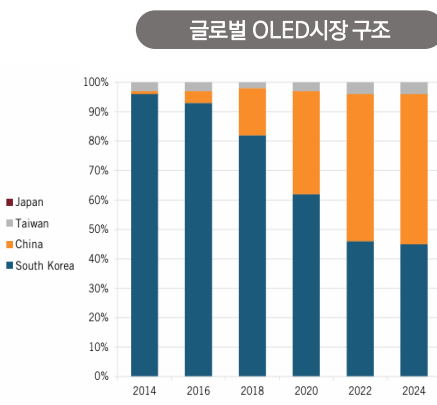
- 전략기술&산업 확보에 총력 →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 등 총동원
- 산업정책을 토대로 先 공급확대 後 구조조정을 공식으로 산업 영토 확장

» (例) 중국 첨단제조 굴기의 상징, 디스플레이

- 12차 5개년 계획(2012) 이후 산업정책 집중 공급 →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1위 달성
- 보조금을 통해 설비투자(자금 조달 등) 리스크 & 재무적 리스크 동시 해결 → 시장에서 양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 '17년 이후, LCD에서 주도권 확보 이후, 이제는 OLED도 한국과 대응한 수준으로 성장



자료 ITIF(2024)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12

2. 전략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안보

1

전략산업의 무기화

- ◆ 소부장에서 공급망으로 확대
- ◆ 전략산업 공급망 우위를 중심으로 주고 받는 美↔中 간 Tit-for-tat

전략산업 핵심 공급망 → 일국의 전략 자산화

- » 日 수출규제 → 전략 산업 핵심 공급망이 언제든지 외교·안보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 » 높은 레버리지 효과 (Small Yard High Fence) → 가장 작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제재 동향

일시	제재내용
'19.8	• 국방부, 연방기관의 中 통신기업(화웨이, ZTE 등) 장비 및 서비스 조달 금지
'20.8	• FDPR 확대, 화웨이 연루 거래 차단
'20.12	• SMIC, DJI 등 반도체기업 대상 제재 확대
'21.1	• 뉴욕증권거래소 중국 3대 통신회사 상장폐지
'21.4	• 중국 슈퍼컴퓨팅 관련 총 7개 기업 및 연구소 Entity List 등재
'21.12	• 중국 사모펀드인 와이즈로즈의 매그나칩 인수 불허
'22.10	•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통제 강화
'23.1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합의
'23.10	• 저성능 시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까지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25.3	• 미 상무부 시와 양자 컴퓨팅 관련 중국 기업 및 기관 50곳 Entity Lists 등재

자료 무역안보관리원 자료를 토대로 정리

대응 수단 역시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 中의 반격 → 시장과 공급망을 전략 무기로 동시 활용

- 2020년 제정된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을 근거로 활용

2020년 이후 중국의 對미국 대응 조치

품목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기업 Micron의 메모리반도체 제품 판매 제한 (20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 문제 제기로 중국 내 중요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조치 • 중국의 시장(수요)을 자렛대로 한 경제적 강압 조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20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륨제품 8종,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해 수출통제 • 반도체, 태양광,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 중국이 발류체인 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료·소재 공급망을 활용한 경제적 강압 조치
흑연 수출통제 (20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 통제 리스트에 등록 •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중국 정부 기관의 Intel 및 AMD 칩 금지 (202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에서 Intel 및 AMD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PC와 서버의 사용을 금지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18종 프로세서와 OS를 모두 중국제 제품으로 지정
항공 우주 등의 품목을 수출허가 품목으로 지정 (202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우주 부품 및 엔진 제조장치 소프트웨어 • 가스터빈 엔진 제조장치 소프트웨어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 수출허가 절차 추가

자료 이 준위(2024)

전략산업=경제안보: 주요국 역시 보조금 경쟁에 참전

- ◆ 일본 국가안전보장을 지렛대로 산업정책 추진
- ◆ EU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총력

일본, 경제안보=산업정책

»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 제정 이후, 전략산업 확보를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 11대 특정중요물자 지정 → 특히, 경제안보적 이슈가 집중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개별 전략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일본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목표

구분	목표
반도체	•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역량 15조엔 달성
배터리	• 2030년까지 연간 150GWh 국내 제조 역량 확보
핵심광물	• 2030년 시점에 배터리 및 영구자석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

자료: 日本 内閣府(2022)

»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투자 지원(보조금) 강화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현황

기업	시기	보조금	기업	시기	보조금
JASM(TSMC)	22.6	4,760억엔	마이크론	23.10	1,670억엔
키옥시아&WD	22.7	929억엔	키옥시아&WD	24.2	1,500억엔
마이크론	22.9	465억엔	JASM(TSMC)	24.2	7,320억엔

자료: 經濟産業省(2024)

EU, 역외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데 총력

» 산업정책 = 산업·기술 측면의 주권(sovverign) 확보

- 「EU CHIPS Act」(2023) → 2030년까지 현재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까지 확대
- 430억 유로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
- EU반도체법 이후, 유럽 전역에 총 68개, 1,00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

EU 역내의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

기업	국가	보조금	주요 내용
TSMC	독일	50억 유로	• 합작회사를 통해 총 100억 유로 규모 팹 건설
Intel	독일	99억 유로	• 300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 발표 (23.6)
STM	프랑스	29억 유로	• 75억 유로 규모의 태양광용 반도체 웨이퍼 생산
ST	이탈리아	3억 유로	•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시설 구축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2024)

EU 반도체법에 따른 R&D 투자 현황

연구소	지원 금액	연구소	지원금액
IMEC (벨기에)	7억 8,400만 유로	Fraunhofer (독일)	3억 5,900만 유로
CEA-Leti (프랑스)	4억 1,400만 유로	CNR (이탈리아)	1억 8,100만 유로

자료: 이 준 외(2024)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12

3. 우리 산업의 현 주소 우리 경제안보는 안녕한가?

침침산중

◆ 미증유의 연속

굳어지는 저성장... “韓 잠재성장을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25.7.7. 연합뉴스

“IMF도 넘겼는데...” 美 관세-中 저가공급에
철강-유화 ‘치명상’ 동아일보 25.4.24.

“트럼프 관세 덩친다” ... 빨간불 켜진 韓 이차전자·車·
반도체·철강 아시아경제 25.3.27.

‘알테쉬’ 공습 가속화... 中, 국내 직구 60%
장악 동아일보 25.2.12.

일본 잃어버린 20년 실체는 ‘제조업 붕괴’
서울경제 18.11.15

“1100여개 이상 국내기업들 영향”... EU CBAM
대응 시급 뉴시스 24.6.5.

일감은 산더미인데 ‘일손’ 이 없다 이투데이 25.5.21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 여수 지정 이
어 서산, 포항 포함될 듯 문화일보 2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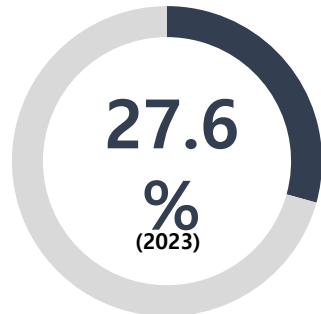
“여천 NCC는 시작” ... ‘셋다운 도미노’ 우려
연합뉴스 25.8.10

우리의 성장엔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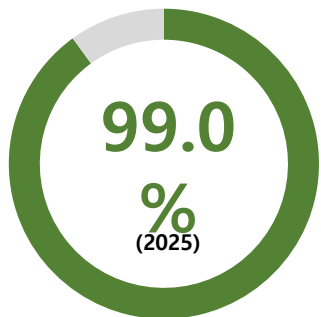
- ◆ 우리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
- ◆ 글로벌 4위 수준의 제조업 종합 경쟁력(UNIDO)

여전히, 제조업!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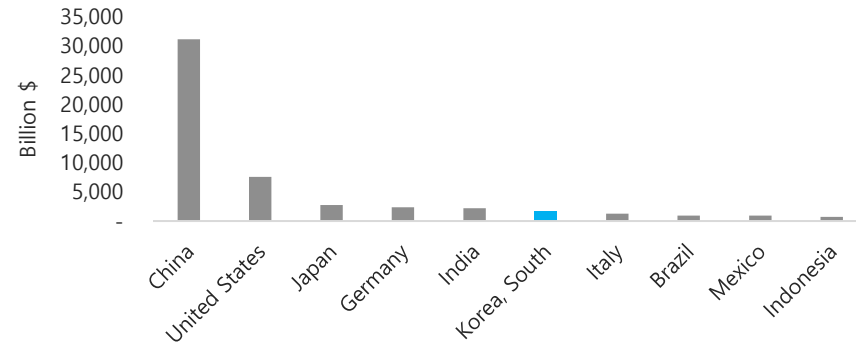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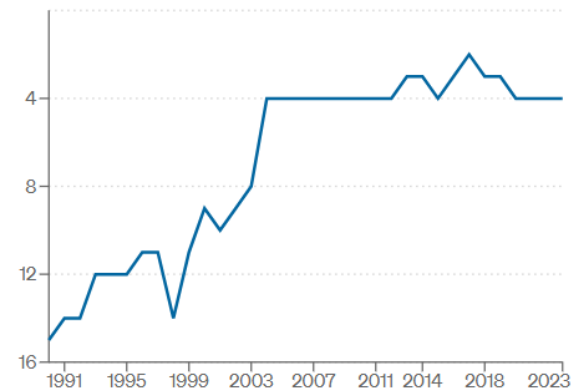
Source: ISTANS, 한국무역협회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Source: HIS Markit
Note: Total Sales (Nominal, 2022)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 변화



Source: UNIDO

과감한 전환 투자와 성공적 탈바꿈

- ◆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성장
- ◆ 현장 기술(생산기술) 역량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

성장의 갈림길에서 과감한 투자

»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 시기 과감한 투자

- 세계 최초 8인치 웨이퍼라인 가동(93년) →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 마련

» 과감한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우리 제조업 경쟁우위의 원천

- 중국을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 반도체, 철강, 석화 등 중간재 산업이 확고한 주력으로 자리매김

對중국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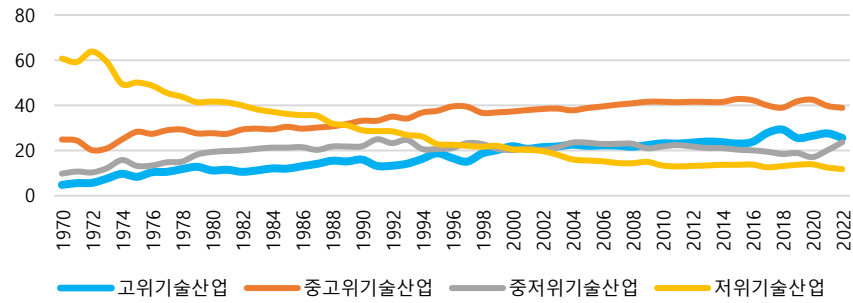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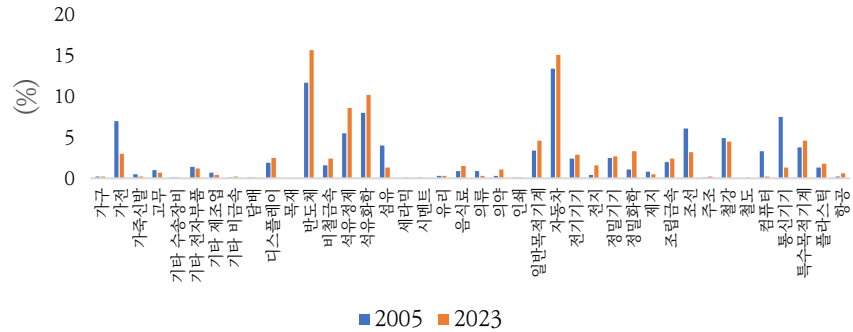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IT, 바이오, 첨단기계 등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

- 고위 + 중고위기술 산업 비중 (%) : ('90년) 49.2 → ('00년) 59.2 → ('22년) 64.5

기술 수준별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우리 무역구조의 변화



새로운 국제 통상·산업 질서(New Normal)의 도래

- ◆ 패러다임 전환기 돌입
- ◆ 새로운 질서에서 경쟁우위 선점 여부에 성패 결정



- 👉 경제안보, 美·中 전략경쟁
- 👉 공급망 진영화 & 블럭화
- 👉 脫탄소, Net Zero
- 👉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
- 👉 상시적 공급망 위기
- 👉 脫중국
- 👉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패권 접근

- 👉 WTO & 자유무역체제
- 👉 글로벌 분업구조
- 👉 수직·집중·효율적 공급망
- 👉 중국의 글로벌 생산 허브화
- 👉 산업정책 무용론
- 👉 탄소집약



변해버린 성장 공식

- ◆ Old Normal에 최적화된 우리 산업 구조
- ◆ 대내외적 위기 경보

예전에는 강점

01 노동 & 자본에 대한 투입 확대

- ✓ 투입 중심의 양적 고성장 실현

02 최고 효율의 탄소집약적 산업 구조

- ✓ 압도적 제조 경쟁력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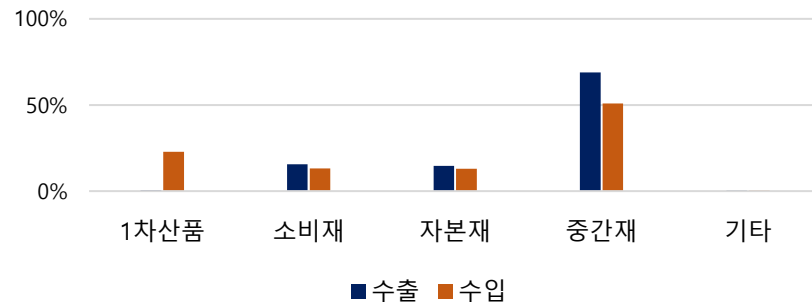
03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

- ✓ 중국 산업 고도화에 최대 수혜

04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

- ✓ 세계 최상위 수준의 GVC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의 상품 성질별 수출입 구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2023년 기준

지금은 리스크

01 인구구조 변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해외투자 증가

- ✓ 요소 투입 성장 방식의 한계에 봉착

0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 Net Zero 시대 도래

- ✓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탄소중립 전환 비용 초래

03 중국제조 2025

- ✓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04 美·中 전략경쟁 및 경제안보 시대

- ✓ 광범위한 공급망 리스크와 막대한 공급망 재구축 비용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국가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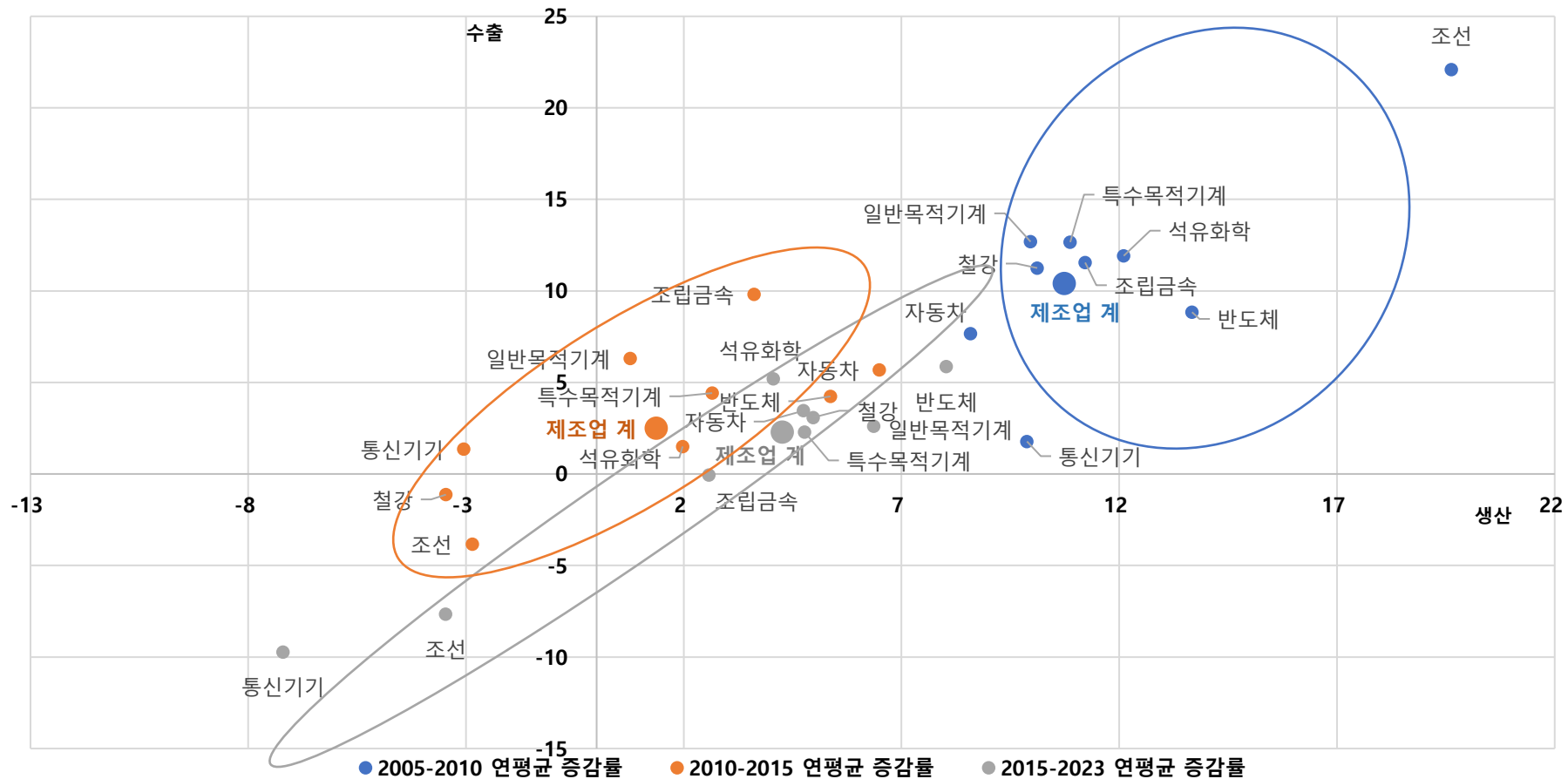


자료: MERICS(2016)

산업 부문 성장 정체는 이미 시작

- ◆ 고착화되고 있는 低성장 기조 → 요소 투입 성장 방식 한계 봉착
- ◆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던 제조업 구조 혁신 속도 둔화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출의 기간별 성장률 비교



불편한 진실 → 공급망 (1)

- ◆ 공급망은 우리 경제안보 체계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
- ◆ 효율적 GVC 체계 구축 &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 → 공급망 집중도 심화 결과 초래

공급망 취약 구조

» 우리 수입액의 21.2%('23년 기준) 가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

- 품목(개수)의 경우, 18.6%가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 ❖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은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실적을 가진 순수입품으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관심품목은 50%의 의존도)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 수준 현황

	금액 (억 달러)	품목 (개)
관심품목	2,141 (33.3%)	3,161 (30.1%)
취약품목	1,355 (21.2%)	1,946 (18.6%)
전체	6,425	10,48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중간재에 집중된 공급망 리스크

» 공급망 리스크 취약 품목 수입액의 69.2%가 중간재에 집중

- 우리 산업·무역 구조의 산물 → 전체 중간재 수입의 29%가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

우리 수입의 상품성질별 구성비(%) 변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차산품	24.3	23.2	18.4	20.8	24.7	22.8
소비재	12.7	13.7	14.8	13.1	12	13.1
자본재	14.4	13	16	14.8	12.2	12.9
중간재	48.2	49.6	50.2	50.9	50.8	50.9
기타	0.5	0.5	0.6	0.4	0.4	0.4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의 상품성질별 구조

	자본재 (비중)	중간재 (비중)	소비재 (비중)	전체
수입액 (억 달러)	128.6 (9.4%)	944.8 (69.2%)	196.7 (14.4%)	1,365
품목 수 (개수)	231 (11.9%)	1,116 (57.3%)	444 (22.8%)	1,94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불편한 진실 → 공급망 (2)

- ◆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 리스크
- ◆ 구조적 난제 → 단기적으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

중국에 깊게 내재된 공급망 리스크

≫ 우리 공급망 리스크의 1/3은 중국발 수입품에서 비롯

-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취약품목 수입액의 33%, 품목 수의 55.8%가 對중국 수입에 집중
- 전체 對중국 수입의 31.5%와 수입 품목 수 11.9%가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의 국가별 현황

	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전체
수입액 (억달러)	129.1 (9.5%)	449.9 (33.0%)	80.7 (5.9%)	85.6 (6.3%)	78.3 (5.7%)	1,365
품목 수 (개수)	179 (9.2%)	1,086 (55.8%)	174 (8.9%)	150 (7.7%)	156 (8.0%)	1,946

국가별 수입 중 공급망 리스크 취약품목 비중(%)

국가	수입액 기준	품목 수 기준
미국	18.1	2.2
중국	31.5	11.9
일본	16.9	2.4
EU	12.6	1.8
아세안	10.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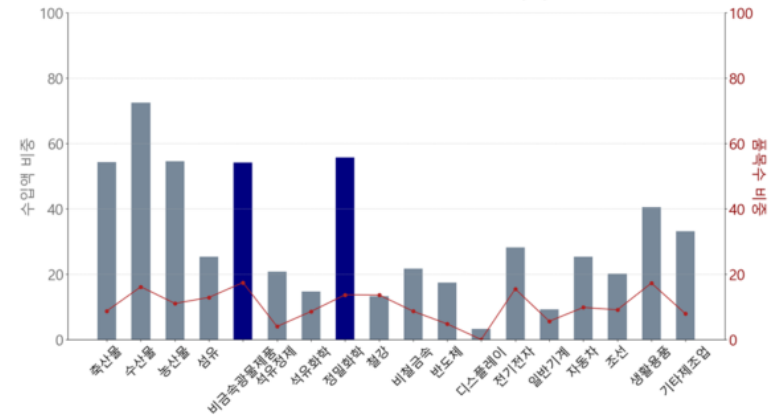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공급망 안정화는 왜 어려운가? → 대안을 찾기 힘든 구조

≫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비금속광물제품, 정밀화학 등에서 발생

- 원료 부재, 노동환경 규제 환경, 전기가격 등 산업 인프라 경쟁 열위 등으로 인해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

對중국 수입의 업종별 리스크 취약품목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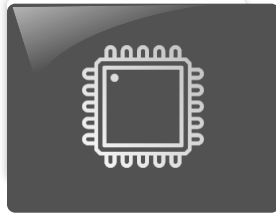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 경제안보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우위 본질은 여전히 효율적 공급망 구축

- 산업용 요소 중국 의존도(%) : 83.4('21) → 71.7('22) → 91.8('23)

우리가 가진 경제안보 레버리지 → 첨단전략산업

- ◆ 4대 전략분야 최선단(leading-edge) 생산기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
- ◆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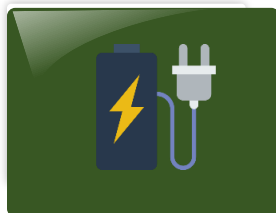
- ✓ 10nm 이하 초미세 공정 제조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
 - 10nm 이하 로직 반도체 부가가치 점유율: 대만 69% vs. 한국 31%, SIA&BCG 2024)
- ✓ AI 반도체 구현에 핵심인 HBM의 사실상 독점적 공급 국가



- ✓ OLED에서 가장 앞선 국가
 - 현재 OLED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단 두 곳
- ✓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 ✓ 제조 역량, 납기 경쟁력, 고도의 Integrity
 - 바이오 신약 개발 및 제조에 천문학적 비용 소요 → 반도체와 같은 밸류체인 기능별 분화 본격화
- ✓ 밸류체인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극소수 기업만 생존



- ✓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의 압도적 양산 역량
 - 투자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압도적인 제조 역량 → 북미 시장 사실상 독점
- ✓ 신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 파트너

높아지는 경제안보 압력,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1)

- ◆ **첨착산중**의 대외여건
- ◆ 우리 산업의 **경쟁우위 요소를 잠식**하는 요소로 작용

01 美·中 전략경쟁	02 미국의 산업정책	03 중국의 산업 고도화
<p>» 미국의 對중국 제재는 일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일본 등과도 제재 스크럼 형성하며 동맹에도 역할 요구 → 중국의 첨단전략기술 접근을 억제하는데 총력 • 첨단에서 범용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 <p>» 중국은 밸류체인 상의 우위 영역을 지렛대로 전략경쟁에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의 제재 전열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국이 가진 우위요소(공급망 및 시장)를 전략적으로 활용 <p>»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당사자 → 전략적 선택 상황 직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전략적 접근 대상 → 중국에 기울어진 산업 구조로 상시적 리스크에 직면 <p>» 기술과 시장 사이 모두 압박 → 막대한 투자 리스크 직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류체인 중첩 구축 부담 →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는 부담 	<p>» 미국의 산업정책은 갈수록 노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산업정책 조합 미국 시장을 향한 공급 채널 변화는 불가피 • 동북아 중심 글로벌 공급체계, 특히 첨단 공급망은 일정 수준 이상 재구조화 예상 <p>»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강력한 협력 파트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협조할 수 있는 유리한 파트너 •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우리 제조 생태계 약화 가능성 상존 <p>» 미국의 경쟁력 회복은 또 다른 위협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앞선 경쟁력이 협력의 전제 조건 → 시장 접근에 있어 상대적 우위를 가진 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전제 조건 • 마이크론 경쟁력 향상이 주는 함의 	<p>» 글로벌 제조업 패권에 근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산업, 외교, 안보 등 전 영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 성장 • 특히, AI, 양자, 우주 등 전략 영역에서 역량이 급부상 <p>» 상호 협력에서 강력한 경쟁으로 한·중 산업관계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중간재 공급 파트너로서 한·중 산업밀월 관계를 형성하며 중국 고도 성장 향유 • 그러나 중국제조 2025 이후, 중국의 첨단 중간재 자립이 현실화되며 경쟁구도로 전환 <p>» 이제는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기술, 자본, 생태계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갖춘 차원이 다른 경쟁자 • 특히, 규칙 기반의 경쟁환경과 다른 여건에서 경쟁 → 보조금, 시장 접근, 공급망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

높아지는 경제안보 압력,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2)

- ◆ 우리도 뛰어난 산업정책 경쟁
- ◆ 경제안보 차원에서 재설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글로벌 산업정책 무한 경쟁 대비

>> 6대 분야, 19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대중소 기업의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상향 (「조특법」 개정, 23.3)

조특법(K-CHIPS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	8	16	15	15	25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적)	1	5	10	3	7	12
일반/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투자 증가분 (23년 투자 증가분)	3	3	4	10	10	10

자료 기획재정부(2023)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 (25.2)

-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4년 추가 연장 → 2031년까지

>> 「반도체 특별법」 제정 (26.1)

공급망 3법 → 경제안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을 구체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 (23.12)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23.5)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24.1)

공급망 3법의 경제안보 관리 대상

구분	정의	경과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기본법」)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	현재 3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선정하여 관리 중
공급망안정품목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산업 공급망 3050」(23.12) 전략을 통해 185개 공급망안정 품목 선정
핵심자원 (「자원안보법」)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법령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 및 부품 등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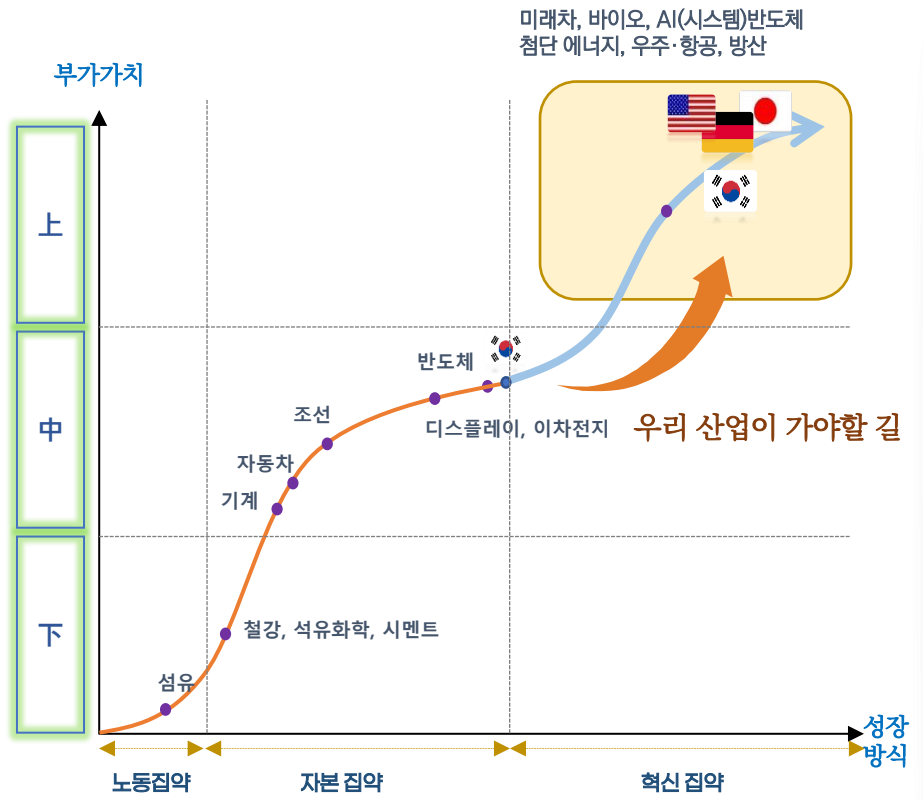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12

4. 경제안보 시대, 우리 산업의 길은?

기호지세(騎虎之勢)! 결국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길

- ◆ 앞으로 가는 길(초격차)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
- ◆ 새로운 게임의 룰 → 위기와 기회요인 병존

성장의 품질을 올리고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



새로운 경쟁 환경 그리고 기회

- 1 글로벌 산업 질서의 미국發 현상 변경이 시작됐다.**
 - 對중국 관세 전쟁 →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ICT Set 및 중간재 공급 구조 균열 초래
 - 脫중국 공급망 흐름 → 중국産 부품 경쟁력의 일정 부분 약화 불가피
- 2 경험해보지 못한 경쟁자, 중국 → ‘협력’과 ‘경쟁’ 사이**
 - 기술, 인재, 자본, 시장, 정책 → 중국은 日, 獨 등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맞서왔던 상대와 차원이 다른 경쟁자
 - 現세대, 次세대에서 생존을 건 경쟁 → 동시에 시장과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
- 3 새로운 경쟁구도, 기업의 뒤에는 국가가 있다.**
 -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 전략 분야 투자 규모 →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흡수하면서 첨단 생산 기반 확보에 총력
- 4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생태계(One Team)의 싸움이다.**
 - 글로벌 선도 대기업 만의 역량으로는 한계 → 경쟁력 있는 생태계 (수요기업+소부장기업+정부) 없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

다시 생각해보는 제조업 → 이제는 제조 자체가 전략 자산

- ◆ 우리 산업의 변화 방향은 명확
- ◆ '다른' 제조(K-제조 로드)를 할 수 있느냐에 성패 결정

한국만의 제조 혁신 모델(K-제조 로드)

» 제조업의 역설

-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제조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제조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 그러나 그들과 다른 우리, 그리고 이제는 희소해진 제조 역량

- 제조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우리 → 제조업 경쟁력 상실의 파급 영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 불가
- 주요 선진국의 제조 역량이 상당 부분 상실된 가운데, 중국의 산업 패권 근접에 따라 제조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상승

» 다시 온 기회, 우리에게 필요한 K-제조 로드

- 제조업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만의 제조 혁신 모델** 창출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



MASGA



Meta Plant



천무

산업 value의 확장 and 업그레이드



지향하는 제조 혁신 모델(K-제조 로드)의 모습

구분	주요 내용
고도의 지능화된 생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토대로 생산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공급 주도자 역할 실행
유연하고 신속적인 산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다양한 GVC 포트폴리오 구축 • 기술 혁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새로운 수요 및 비즈니스에 대한 산업화 대응
역동적이며 포용적인 제조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이고 열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개별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을 뛰어 넘는 생태계 조성

3가지 린치핀(Linchpin)! 우리 산업 핵심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

- ◆ ▲생산 공간, ▲기술·제품, ▲생태계
- ◆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공급 파트너

01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생산 공간

» 산업 인프라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

- 글로벌 경쟁력에 최우선 가치를 둔 생산 공간 재설계
- 지향하는 글로벌 경쟁우위 수준을 설정하고 민관 투자 부담

» 특화산단 지원체계 강화로 전략적 공급 허브로 조성

- 첨단전략산업 특화산단에 혁신 기반 구축 → 기술 혁신 및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 입지 경쟁 지수 개발 및 활용

- 주변 경쟁국(中, 日, 臺, 아세안) 대비 산업 입지 경쟁력을 진단·활용 → 경쟁우위 영역 지속 관리

02 1세대 앞선 기술·제품

» 차세대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성 담보

- 특별회계의 전략적 관리 → 재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
-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강화 → 정책 효율성 제고

» 전략 소부장 동시 확보 및 공급망 관리 체계 고도화

- 소부장·공급망 R&D 사업 연계

» 現세대·次세대 주력제품 공급 역량 유지·강화

- 마더팩토리形 투자 촉진 카테고리 신설 → 최선단 공정의 국내화 유도
- 적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국민성장펀드의 전략적 운용

03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

» 밸류체인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생태계 확보

- 양질의 소부장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예시: 한국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 소부장 R&D와 이어달리기

» 脫중국 공급망 흡수 → 신뢰할 수 있는 공급 허브로 자리매김

- 유턴 기업 → 혁신적 산업 인프라 공급,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의 전략적 활용
- 전략적 외투기업 유치 → 脫중국 수요가 있는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냉정한 현실, 그래서 필요한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 **높아진 산업(제조)의 가치**, 반면 **좁아진 산업정책 공간**
- ◆ **산업전략(경쟁력&생존)에** 최우선한 정책 통합 설계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전략 분야 확보戰 → 이미 국가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

- 실기(失期)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 적기 공급 확보 여부에 경쟁우위 좌우
 - ❖ TSMC 구마모토 Fab은 계획 발표 28개월만에 완공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 6년 만에 착공

≫ 더 중요해진 정부 역할, 그러나 점차 좁아지고 있는 산업정책 공간

-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 전략 분야 투자 규모 →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흡수하면서 첨단 생산 기반 확보에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우리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풀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정책 패러독스**에 직면 → 산업 생존 관점에서 정책 상충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외부의 압력(위기) → 산업정책 추진 모멘텀으로 활용

- 최근의 성공적 산업정책은 모두 대외 압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
 - ❖ **일본수출규제 (소부장), 요소수 대란 (공급망),美中 전략경쟁 (첨단전략산업법)**
- 미국 관세전쟁 + 중국 제조 굴기 → 우리 산업의 전례없는 위기감 확산 ⇒ **우리 산업 경쟁우위 요소의 전면적 재검토 및 혁신 정책 추진 동력으로 활용**

결국은 추진력 → 산업정책 중심의 정책 설계

✓ 결국은 투자, 선결조건은 투자 여건의 획기적 제고

1 국내 제조 생태계 유지·강화를 고려한 전략적 해외투자

- 국내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및 생태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산업정책 마련 → 산업 인프라 공급, 국내생산촉진세제, 지투 보조금 등

2 전략산업 로드맵에 초점을 맞춘 AI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 전략거점 (RE100 산단, 첨단전략산업 특화산단 등)에 전력·AI인프라 및 산업 AI 모델 집중 공급

3 상호보완적 산업-통상 연계

- 對미국 투자와 연계된 전략적 미국 진출 → 韓美 간 상보적 밸류체인 구축
- 주요국 및 신흥국 산업 구조&공백을 고려한 무역 구조 혁신과 맞춤형 협력 의제 발굴/제안을 통해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

4 산업 전문성을 토대로 한 생산적 금융 공급

- 중장기 경제안보 및 산업정책 관점에서 전략산업 확보, 공급망 리스크 해소, 지역 균형 성장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지원

감사합니다.

이 준(Ph.D.), jlee@kiet.re.kr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2026년 3월 25일(수) 14:00-16:00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